

# 지방소멸시대 현실로... 전면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해야

##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출발”

민주 김성주 의원, “수도권 과밀·집중 1극 체제 지방소멸 불려와  
국민연금과 생태계 구축 가능한 ‘한국투자공사(KIC)’ 이전이 적함”

지방소멸시대에 맞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면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의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소멸을 불려오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첫날을 맞은 4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 김성주 의원은 인구·경제력 등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까지 수도권에 있는 것은 균형발전이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지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의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를 예로 들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함께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완주와 전주 일대에 조성한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계획 인구 달성률 2위(100.7%)·고용효과 2위로 10곳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전북 혁신도시조차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결한 현재 규모로는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産)·학(學)·연(研) 클러스터’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적 기반과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

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도시의 기회자로 ‘집기 안에 대안을 박아두고 싶다’고 까지 표현한 노무현 대통령과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문재인 정부 사이에 집권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공기업 민영화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정책적 공백의 반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룡 공약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본격적인 시합대에 올라온 윤석열 정부에게 “균형발전을 국가의 생명이 담긴 초당적 과제로 인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국책사업 발굴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민선 8기 전북도 혁신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 추진상황 중간보고회가 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2019년 이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이탈 4174명”

민주 윤준병 의원 “범정부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 시급”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는 농어촌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의 계절근로제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근로자를 유입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서 중도 또는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근로자만 무려 4,174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근로자만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업무에 있어 지자체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인원이 계절근로제를 통해 해외로 입국한 인원보다 많은 만큼 이탈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실제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제 외국인근로자가 이탈자는 총 1,008명

(24.1%)으로 농축산업 981명, 어업 17명이었으며,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는 총 3,166명(75.9%)으로 농축산업 1,373명, 어업 1,793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보면, 전체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중 농축산업이 2,364명으로 전체 56.6%를 차지했고, 어업은 1,810명(43.4%)이었다. 지역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현황을 보면 전남에서의 이탈 외국인근로자가 1,016명으로 전체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669명(16.0%), 충남 457명(10.9%), 전북 425명(10.2%) 순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은 농어가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이탈이 불법체류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총 1만 7,772명으로 계절근로 452명(농업 442명, 어업 10명), 고용허가(비전문취업) 1만 7,320명(농업 1만 538명, 어업 7,224명)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노동력 부족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을 보충해왔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중도·무단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9년 이후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이탈자가 무려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가 중도 이탈하고 또 이탈한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브로커 개입 여지 사전 근절,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개별 지자체에만 외국 인근로자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철에 한시적(3~5개월)으로 고용하며 농업부문에 한해 운용하는 법무부 소관 제도로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7년 본사업으로 추진됐다. /정음=김대환기자

## “10·4 공동선언 15주년... 그 정신, 다음 정부로 못 이어져”

문 전 대통령 “지금 한반도 매우 불안... 국익·평화 우선해 관계복원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 15주년인 4일, 그날의 선언이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북 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와 평화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항구적 평화체제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이 있었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의 정신은 다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하고 있고 남북 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주변 강대국에 의존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걸음 더 전진을 이뤘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하고 있고 남북 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주변 강대국에 의존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뉴스

이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상했던 10·4 공동선언의 원대한 포부를 남북한이 함께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어 북방방을 밟았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한다.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공영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마련 분질미, 밀 대체용으로 부적합”

민주 이원택 의원 “밀가루 대체 아나... 글루텐 첨가 없어 밀에 대한 식량주권 0.8%, 국산밀 지원 통해 자급률 높여야”

정부가 밀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분질미가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에 가깝다며 국산 밀가루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분질미 가공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국내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글루텐 성분이 없는 분질미는 밀가루를 대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텐은 밀가루 조직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쫄쫄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성분이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6월 8일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기 위해 20만톤을 통해 인력을 보충해왔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분질미를 테스트한 업체들이 농식품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와 일부 분질미로 식빵·바게트·단과자빵·카스테라를 만들었는데, 식빵과 바게트는 글루텐 성분이 없는 분질미로 제품을 만들면 빵이 적어 가공이 부적합했으며, 카스테라의 경우 일반 쌀가루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FC는 분질미로 카스테라를 만들었는데, 기존 제품 대비 구조력이 떨어지고, 볼륨감이 낮았으며, 윗면이 거칠고 두께가 현상이 발생했다. 식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맛의 경우 축축한 식감과 함께 쌀가루 특유의 텁텁함이 발생

해 제품의 품질이 떨어졌으며, 특히 노화 진행이 빨라 유통기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현재 100ha에서 475톤가량 생산중인 분질미를 20년까지 4만2천ha에서 20만톤 생산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보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4년만에 42배 늘린다는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또 분질미 산업화 지원을 위해 공공비축재고를 활용한 공급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공공비축매입만큼 쌀 수매량 감축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분질미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글루텐을 첨가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밀을 써야지 분질미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며, “밀에 대한 우리나라 식량주권은 0.8%라며, 쌀가루 아닌 국산 밀 지원을 통해 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도의회, 이경운 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 인사청문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장 이병도가 4일 개최됐다.

문화관광재단(2016년 4월 출범) 대표 이사 임기가 지난 6월 8일 종료되면서 전북 문화예술계를 이끌 새로운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인사청문회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도덕성 검증에서는 경력, 재산, 부동산 금융거래내역 등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도덕성이나 가치관에 흠결이 없는지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2차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 회의로 전환해 전북지역에 연고가 없는 후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적합성, 재단 기

금 규모의 적절성,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 전보인사 실태, 브랜드 상설공연 개선방안, 지역관광산업 진흥 방안 등 대표이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질부터 경영총괄, 조직 및 사업관리 등 업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병도 위원장은 “출범 7년 차에도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재단이 도민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결과는 8일 결과보고서 채택 후 의장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김경수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전북도의회와 협력 다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윤정훈(무주)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수봉(완주) 수석부대표가 4일 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남종섭 원내대표)과 면담을 했다.

이날 원내대표단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전국 광역의원협의회 운영과 활성화 방안 등 광역의회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정훈 원내대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에서는 9건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윤정훈(무주) 원내대표, 윤수봉(완주) 수석부대표, 김성수(고창), 한정수(익산), 김승지(비례) 부대표 이상 5명이다. /김경수 기자

##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

김대중 의회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군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전북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군복무 중인 전북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이 병

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북도가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시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군복무가 시작된 도내 거주 청년이면 자동 가입돼 보장될 전망이다.

군복무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이 해당하며 직급군인 등은 제외된다. /김경수 기자